

# 먹거리 불안·파동의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동학

박형신

고려대 강사, 사회이론·감정사회학 전공  
phsnet4u@korea.ac.kr

I. 머리말

- II. 먹거리 불안·파동의 연구동향: 미디어에서 감정으로
- III. 근대 먹거리 불안의 발생 메커니즘: 근대 먹거리 체계
- IV. 먹거리 파동의 감정동학: 공포 커뮤니케이션
- V. 맺음말: '먹거리 윤리학'을 위하여

## I. 머리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먹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텔레비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먹거리 관련 소재가 경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먹거리 관련 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두 매체가 먹거리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텔레비전이 이른바 맛있는 먹거리를 소개하는 ‘맛 기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먹거리 관련 서적들은 먹거리의 위험성을 알리는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먹거리가 갖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먹거리는 한편으로 우리 인간에게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한다. 현재 먹거리와 관련된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먹거리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선택과 취향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건강과 안전 역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먹거리 사건과 먹거리 파동들은 후자에 특히 더 주목하게 하였다. 2008년 밤을 촛불로 밝혔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물론이고, 3월의 생쥐 머리 새우깡 사건과 9월의 멜라민 파동은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를 우리 사회의 전면에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다. AI(조류인플루엔자)와 GMO(유전자 변형 농작물)가 식탁의 안전을 위협했고, 먹거리에서의 다이옥신 검출, 이물질 발견 등은 소비자들의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먹거리 파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량 만두’ 사건, ‘기생충 김치’ 사건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고 있지만, 그것의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 결과 광우병 파동이 몰아친 2008년에 민간연구기관과 통계청에서 실시한 두 여론조사 모두에서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이나 인권침해 우려보다 유해식품의 위험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러한 먹거리 불안의식은 “하루 세 끼 먹는 ‘밥’은 이제 즐거움이나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두려움과 불안 덩어리가 되었다”는 표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sup>2)</sup>

1) 유선형·이강형, 『저신뢰 위험사회의 한국 언론』(서울: 한국언론재단, 2008); 《파이낸셜뉴스》, 2008년 10월 18일자.

2) 강이현, 「공포의 식탁: 인간 욕망에 대한 지구의 경고-광우병 쇠고기, GMO, 조류

하지만 이러한 먹거리 불안은 과거처럼 기쁨으로 인한 먹거리 부족이나 식품 미생물 세균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인간에 의해 '제조된'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먹거리 파동이 우연적 또는 우발적인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근대 먹거리 체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 놀란 가슴이 진정되고 나면, 먹거리 파동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또 발생하면 '인재'라는 말로 비난하고, 또 파동은 거듭된다. 먹거리 파동의 이 같은 성격은 단지가 문제가 단순히 먹거리 생산이라는 (농업)경제적 문제나 먹거리 관리와 단속이라는 행정 및 정책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학적 설명의 문제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먹거리 불안과 먹거리 파동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먹거리 불안·파동의 구조적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동학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먹거리 불안·파동의 연구동향: 미디어에서 감정으로

그간 서구 및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 관련 사건은 무수히 발생해 왔지만, 먹거리 자체의 위험이 아닌 먹거리 불안이나 파동 그 자체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sup>3)</sup> 그렇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다수 제출되어 왔고, 그러한 연구들은 몇 가지 연구동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이자 주류를 이루는 연구동향은 먹거리 불안의식 형성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일명 '뉴스의 나선형'이라 불리는 것으로, 먹거리 불안의 발생과 소멸을 언론 보도와 청중의 민감화 간의 피드백과 그 화제의 진부화를 통해 설명한다.<sup>4)</sup> 이렇게 먹거리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환경과생명』 08/여름, 통권 56호(2008), 49-61쪽.

3) 물론 먹거리 자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많이 있다. 최근의 사회학적 연구로는 박재환, 일상성·일상문화연구회, 『일상과 음식』(한울아카데미, 2009)을 참고하라.

4) D. Miller and J. Reilly, "Making an issue of food safety: the media, pressure groups, and the public sphere". in D. Maurer and S. Sobel(eds), *Eating Agendas: Food and Nutrition as Social Problems*(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5); 박성희, 「위험 보도의 위기구축 기제 프레임 분석: 식품안전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5호(2006); 이귀옥·박조원, 「식품 위해(food risk)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석: 김치 파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0집 5호.

불안 내지 파동을 매스컴에 돌리는 설명은 일반인들 - 특히 보수적인 -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언론은 먹거리에 대한 위협의식을 증폭시키거나 악화시킬 뿐이지 그것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다.<sup>5)</sup> 둘째로, 청중의 수동성을 전제한 것으로, 근대의 성찰적 주체에 대한 논의를 망각하고 있다. 셋째로, 이러한 설명은 무수한 먹거리 사건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건은 단순한 사건에 머물고, 또 어떤 사건은 먹거리 파동으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넷째, 언론이 대중의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언론이다. 언론은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과장하기도 하지만, 먹거리 위협을 뉴스 항목으로 선택하는 것은 단지 선정성과 주목을 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언론인 자체도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론인이 전혀 공포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언론인은 그러한 보도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할 것이다. 다섯째, 왜 먹거리 파동이 과거보다 현재 더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두 번째 연구동향은 먹거리 불안·파동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설명방식은 먹거리 불안과 파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근대 먹거리 체계 및 근대 글로벌 식품기업의 동학 자체에 먹거리 불안의 원인이 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sup>6)</sup> 이 접근방식은 근대 먹거리 불안 발생 메커니즘의 기틀을 제시함으로써 앞서의 설명방식이 갖는 한계 중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준다. 하지만 이 접근방식은 근대 먹거리 체계의 한계와 먹거리 불안을 직접 연결 지을 뿐, 어떤 경우에 먹거리 사건이 먹거리 파동으로 전개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연구동향은 현대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고 위협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통계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sup>7)</sup>

5) F. Furedi, *Culture of Fear Revisited*(London: Continuum, 2004), p.60.

6) B. Kneen, *From Land to Mouth*(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2); 김철규, 「현대 식품체계의 동학과 먹거리 주권」, 『ECO』 제12권 2호(2008a); 김철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먹거리 정치」, 『한국사회』 제9집 2호(2008b);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푸드』(서울: 이후, 2009).

7) A. Knight and R. Warland, "Determinants of Food Safety Risk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Rural Sociology*, vol.70, no.2(2005); 최정숙·전혜경·황대용·남희정, 「주

이러한 시도들은 소비자들의 불안의식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위험인식과 관련한 변인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먹거리 파동의 배후에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보여줄 뿐 어떻게 그러한 감정이 먹거리 파동으로 나아가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네 번째는 이러한 먹거리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연구이다. 이 입장에서는 먹거리 위협에 대처하여 어떻게 다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sup>8)</sup> 이는 먹거리 파동이 사라지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설명은 왜 또다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먹거리 파동이 반복해서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먹거리 파동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사라지는지를 감정사회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 연구자의 일련의 연구가 보여주듯이,<sup>9)</sup> 우리 사회에 수많은 먹거리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부록으로 제시된 표 참고), 거기에는 바로 감정동학이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감정사회학, 그것도 거시적 감정사회학은 “감정이 구조와 행위를 연계시킨다”고 본다. 대표적인 감정사회학자 바바렛은 “감정적 관여 없이는 사회에서 어떤 행위도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행위의 배후에서 작동하며 사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감정을 ‘배후 감정(back-ground emotion)’이라고 규정한다.<sup>10)</sup> 따라서 감정사회학은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을 발생시키고 사람들이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감정동학을 통해 포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sup>11)</sup>

---

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 우려의 관련요인],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제34권 1호(2005).

8) A. M. Sallerberg, “In food we trust? Vitally necessary confidence and unfamiliar ways of attaining it”, in E. L. Fürst, R. Prättälä, M. Ekström, L. Holm and U. Kjærnes(eds), *Palatable Worlds: Sociocultural Food Studies*(Oslo: Solum Forlag, 1991); Ganskau, E., *Trust in Coping with Food Risks: The Case of St. Petersburg Consumers*(Saarbrücken, VDM, 2008).

9) 이철호·맹영선, 『식품위생사건백서』(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이철호, 『식품위생사건백서』II(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이철호, 「우리나라 식품위생사건의 발생현황과 대응사례분석」, 『식품과학과 산업』 제39집 2호(2006).

10) 잭 바바렛, 「서론: 왜 감정이 중요한가」, 잭 바바렛 편,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서울: 이학사, 2009), 7-22쪽; 잭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서울: 일신사, 2007).

11) 박형신·정수남,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 이론』 통권 15집(2009).

이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이 먹거리 불안의 구조적 메커니즘과 먹거리 파동 간을 매개한다는 입장에서, 먼저 먹거리 불안과 파동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파동이 형성되고 사라지게 되는 감정동학을 설명한다. 아울러 먹거리의 양가성을 통해 먹거리 불안의 근원을 도출하고, 단순한 먹거리 사건과 먹거리 파동을 논리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먹거리 파동의 감정적 성격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기준에 입각할 때 분명하게 먹거리 파동에 해당하는 최근 사례로는 유전자 조작 식품 파동, 광우병 파동, 멜라민 파동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의 목적이 먹거리 파동의 메커니즘과 동학을 설명하는 것인 만큼, 먹거리 파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이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제시한 표를 참고 바람). 마지막으로, 이러한 먹거리 파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먹거리 윤리학’을 제시한다.

### III. 근대 먹거리 불안의 발생 메커니즘: 근대 먹거리 체계

#### 1. 먹거리의 양가성과 먹거리 불안

먹거리와 관련한 위험과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류의 발생과 함께 먹거리의 부족은 항상 인간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미생물과 독소에 의한 먹거리의 자연적 오염은 건강을 위협해 왔다. 전자의 먹거리 불안은 인간이 먹거리를 자연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먹거리와 질병 간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먹거리 불안을 부추겨왔다. 근대 먹거리 체계의 구축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해왔고, 근대 과학 체계는 먹거리로부터 건강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의 먹거리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먹거리 불안은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평소 ‘매우 불안’(7.6%)하거나

‘불안한 편’(57.8%)이라는 주부가 65.4%에 달한다.<sup>12)</sup> 그렇다면 이러한 먹거리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쩌면 일단 전통적으로 가장 위협적이었던 먹거리 위협들이 배후로 퇴각하자, 이전에는 은폐되어 있거나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미묘한 불안들이 보다 부각되고 그리하여 공중의 주목을 더 받은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명은 그간 내재해 있던 먹거리 불안 요인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먹거리 불안은 먹거리 자체에 내재하는 양가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비어즈워스와 케일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역설을 제시한다.<sup>13)</sup> 첫째는 ‘쾌감과 불쾌감 역설’로 칭할 수 있는 것으로, 음식이 미각적 만족과 충만감 및 만족감이라는 좋은 느낌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또한 조금 불쾌한 것에서부터 심히 괴로운 것에 이르는 다양한 느낌과 반응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건강과 질병 역설’로, 음식이 신체 에너지의 원천이고 또 활력과 건강의 토대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또한 질병유발 물질이나 유기물을 몸으로 끌어들이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셋째는 ‘삶과 죽음 역설’로, 음식은 생명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만 먹는 행위는 다른 유기체의 죽음과 소멸을 수반한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첫 번째 역설은 먹거리를 선택할 때, 특히 새로운 먹거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좋아하는 먹거리가 신체비만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때 개인들의 불안을 설명해 준다. 세 번째 역설은 식용 동물에 대한 상해와 그것의 고통 및 죽음에 대한 윤리적 관심과 관련한 불안을 야기하며, 특정 먹거리 내지 먹거리 소비자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먹거리 동물에 대한 도덕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 두 역설이 초래하는 불안은 어디까지나 먹거리에 대한 개인적 선택과 관련한 문제이지 특정 먹거리 자체가 갖는 본질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은 개인적으로 해소될 뿐 사회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집합적 차원에서 이러한 먹거리 불안에 대한 대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채식주의와 같은 대안적 먹거리 선택 내지 동물권리보

12) 최정숙 외, 앞의 논문(2005), 67쪽.

13) A. Beardsworth and T. Keil, *Sociology on Menu: An Invitation to the Study of Food and Society*(London: Routledge, 1997), pp.152-153.

호운동 등으로 나타날 뿐 먹거리 자체에 대한 불안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반면, 두 번째 역설은 먹거리 선택의 영역을 넘어 개별 인간 존재의 실존이라는 궁극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살기 위해 먹어야 하지만, 먹음으로써 죽거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이 불안의 핵심이다. 이 불안은 앞서의 불안과는 달리 우리가 먹거리 자체의 속성 - 이를테면 유해성 - 을 알지 못하거나 먹거리와 건강 간의 관계 - 특정 먹거리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 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불안의 원인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먹거리 자체 내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먹거리 위험이 “단지 어떤 개인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와는 전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sup>14)</sup> 따라서 이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손실과 이익과 관련한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일단 위험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리하여 인간이 단지 최소한으로만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나면, 가장 현명한 행위 경로는 그것을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것이 된다. 먹거리 위험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대처는 개인적 수준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동일한 불안대처 양식으로 나타나고, 개인적 수준의 불안을 넘어 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의 이 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먹거리 불안의 구조적 발생 메커니즘이다.

## 2. 근대 먹거리 체계의 불안 발생 메커니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 개체군의 음식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되어 온 먹거리 생산 및 유통과 연관된 상호의존적인 상호관계의 복합체”를 먹거리 체계(food system)라고 일컫는다.<sup>15)</sup> 그런데 근대사회의 먹거리 체계는 생산·유통·소비라는 측면에서 전통사회의 먹거리 체계와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표1 참고). 첫째, 근대 먹거리 체계는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적 먹거리 생산시스템을 축으로 하여 구축되며, 인구 대다수가 먹거리 생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통은

14) Furedi, *op. cit.*(2004), p.21.

15) Beardsworth and Keil, *op. cit.*(1997), p.33.



상업시장을 통해 탈지역적·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며, 화폐와 시장이 접근을 지배한다. 셋째, 소비는 자연적·계절적 제약을 벗어나 있으며, 지불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거리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 결과 현재 돈만 있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식품과 음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는 전 세계적으로 2만 5천 종의 제품이 있으며, 2002년에만 2만 종이 넘는 식음료가 새로 출시되었다.<sup>16)</sup>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표1-전통적 먹거리 체계와 근대적 먹거리 체계 비교

활동	전통적 체계	근대적 체계
생산	소규모/제한적	대규모/고도로 전문적/산업적
	사치품을 뺀 모든 제품이 지역에 기반을 둔	탈지역적/지구적
	높은 농업종사 인구비율	인구 대다수가 먹거리 생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유통	지역경계 내	국제적/지구적
	친족 및 여타 사회적 네트워크가 교환 지배	화폐와 시장이 접근 지배
소비	수확기와 계절에 따른 풍요와 결핍이 이어짐	언제나 구입가능한 먹거리/계절과 무관
	구입능력과 지위가 선택 제한	지불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선택 가능
	사회 내 먹거리 불평등	사회 간·사회 내 먹거리 불평등

출처: Beardsworth, A. and Teresa Keil, *Sociology on Menu: An Invitation to the Study of Food and Society*(London: Routledge, 1997), p.33.

근대 먹거리 체계의 발전은 먹거리 공급의 안전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지만, 근대 먹거리 체계는 먹거리를 둘러싼 '거리'를 증가시키며, 먹거리 불안을 체계적으로 생산해 왔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사회적 거리'로, 먹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이다. 도시화·산업화 과정은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자 간의 직접적 연계를 붕괴시켰고, 전례 없는 먹거리 수요의 창출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포드주의 농업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실제로 이러한 먹거리 체계의 산업화는 먹거리 생산과 가공이 점차 평균적인 먹거리 소비자의 시야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이것은 먹거리 불안과 관련하여

16) 팀 랭·마이클 헤즈먼, 박종근 역, 『식품전쟁: 음식 그리고 문화와 시장을 둘러싼 세계 대전』(서울: 아리, 2007), 30쪽.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먹거리 생산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먹거리 체계에서 생산자는 곧 소비자이거나 판매자였다. 생산자를 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먹거리의 생산이 ‘자연’의존적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제조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즉 먹거리는 소비자들이 단지 막연하게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법에 의해 생산된다. 따라서 최종 먹거리 소비재에는 알려지지 않은 속성 내지 성분이 들어 있게 되고, 이러한 세부 내용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을 조장한다.

둘째는 ‘공간적 거리’로, 먹거리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거리이다. 근대 먹거리 체계는 상업적 원거리 교역에 기초한 것으로, 현재는 글로벌 식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통적인 먹거리 체계에서는 먹거리와 먹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는 지역적 연결고리를 가지지 않은 공간적 맥락을 잃은 먹거리이다.<sup>17)</sup> 전통사회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먹거리를 먹었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것을 먹기 때문에 자신이 잘 모르는 먹거리를 먹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글로벌 식품체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운송수단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역적 잉여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한 농화학 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농약과 방부제 등 먹거리 잔류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인간 지식의 증대는 소비자 먹거리 불안의 또 다른 원천으로 작동한다.

셋째는 ‘시간적 거리’로, 생산된 시점과 소비된 시점 간의 거리이다. 이 시간적 거리는 근대 먹거리 체계의 성립과 함께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고 있다. 먹거리에서 시간적 거리의 확장이 요구되었던 것은 먹거리 생산이 자연에 간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 먹거리는 기후와 온도 등 자연조건에 따라 계절적 또는 지역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 것은 통조림 제조기술의 발달 등 저장과학과 저장기술의 발전이었고, 이것은 또한 앞서 언급한 지역적 거리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패방지를 위한 첨가제에

17) Beardsworth and Keil, *op. cit.*(1997), p.158.

18) 김종택, 앞의 책(2009), 19쪽.

대한 불안을 증가시켰고, 신선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재배기술의 발전은 계절에 관계없는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적 거리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먹거리 생산기술은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을 축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기간까지를 축소하고 있다. 비료와 인공사료와 같은 화학의 도움으로 더 크게 더 빨리 생산하던 것을 넘어, 이제 유전공학의 지원으로 자연을 ‘개조’하며 그 생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먹거리 소비자는 먹거리의 오염여부뿐만 아니라 그 성분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피슬러에 따르면, 이제 근대 개인들은 계절과 장소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일종의 문화적 진공상태에서 점점 더 자신들의 음식물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 음식물의 무규범상태는 그 자체로 근대사회의 불안을 유발하는 특성의 하나이다.<sup>19)</sup>

이상과 같은 거리의 확대(또는 축소)는 먹거리의 생산에서 생산자, 공간, 시간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종은 먹거리 소비자에게는 앞서 설명했듯이 먹거리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알 수 없음은 소비자 불안의 원천을 이룬다. 과거에는 직접 생산자를 알고 있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자연적 시간의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먹거리 소비자에게 하나의 신뢰의 원천이었다. 이제 소비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생산했는지를 알 수 없는 먹거리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 ‘알 수 없음’은 소비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그 미래의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게 한다. 왜냐하면 미지의 것은 정의상 위협의 영역이기 때문이다.<sup>20)</sup>

또한 현대 글로벌 기업 먹거리 체계의 작동방식은 먹거리의 안전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으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 첫째, 식품이 기업의 단기적 이익과 효율성 논리에 의해 생산-유통됨으로써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건강의 가치는 사상된다.<sup>21)</sup> 다시 말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안전한 먹거리보다는 더 싼 먹거리의 더 많은 생산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게 한다. “이윤에

19) Fischler, C., "Food Habits, Social Change and the Nature/Culture Dilemma",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19, no.6(1980); Beardsworth and Keil, *op. cit.*(1997), pp.161-162.

20) Furedi, *op. cit.*(2004), pp.138-139.

21) 김철규, 앞의 논문(2008a), 15쪽.

끓주린 자들”이라는 비판적 표현은 글로벌 식품 기업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sup>22)</sup> 둘째로, 농업 및 식품 과학기술의 발전에 입각한 전문화된 먹거리 생산체계 속에서 생산과정은 소비자에게 은폐된 채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생산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전문화된 지식 없이는 먹거리 생산과정과 생산물의 안전성을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및 잔류농약 등과 함께 미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신종 위해물질이 계속 출현하며, 먹거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WTO 체제 하에서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화학공업의 발달은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이나 유전자 조작 물질의 문제를 전지구적 문제로 확산시키면서 먹거리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생명활동의 불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있다.<sup>23)</sup> 앞서 언급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부들은 ‘잔류농약’에 대해 96.0%, ‘식품첨가물’에 대해 95.7%, ‘환경호르몬’에 대해 93.0%, 식중독균 등 ‘유해미생물’에 대해 91.7%,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90.2% 등 먹거리와 관련해 매우 크게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4)</sup> 이처럼 근대 먹거리 체계에는 먹거리 불안과 파동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먹거리 파동의 감정동학: 공포 커뮤니케이션

##### 1. 먹거리 사건과 먹거리 파동

앞서 설명한 근대 먹거리 체계와 그것에 내재한 불안의식은 무수한 먹거리 사건과 먹거리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먹거리와 관련한 사건들은 매 시간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거듭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들에 의해 묻혀버리거나 언론에 보도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사건에 머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비해 더 큰 불안을 야기하며, 먹거리 파동으로 이어지기도

22) 프레드 맥도프·존 포스터·프레드릭 버텔 편, 유병선 외 역, 『이윤에 끓주린 자들』(서울: 울력, 2006).

23) 권영근, 「환경 호르몬, 유전자 조작 물질, 먹거리의 안전」, 『환경과생명』 통권 30호 (2001), 62쪽.

24) 최정숙 외, 앞의 논문(2005), 68쪽.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먹거리 파동을 불러일으키는가?

‘먹거리 파동’은 “공중의 인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장·단기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음식물 불안의 격심한 집합적 분출”을 일컫는다.<sup>25)</sup> 이러한 먹거리 파동은 단순한 먹거리 사건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표2 참고). 먼저 발생 원인의 측면에서 볼 때, 먹거리 사건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먹거리 파동은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먹거리 사건은 대체로 최종 생산자의 무지에 의한 실수로 발생하거나 또는 생산자 개인의 과도한 이윤동기에 의해 위험한 물질이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과정에서 첨가됨으로써 발생한다. 이를테면 농약 콩나물이나 납이 든 꽃게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먹거리 파동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먹거리 생산과정에서 먹거리의 최종 생산자나 판매자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원료단계에서 유해물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의 첨가나 유전자 조작 식품을 사용하거나 불철저한 위생검사 하에서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 등에 의한 먹거리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표2-먹거리 사건과 먹거리 파동의 비교

	먹거리 사건	먹거리 파동
원인	개인적	구조적
위해식품 식별	가시적	비가시적
위해식품 생산자	분명하게 확인가능	불분명
규제	용이함	어렵거나 불가능
대책	법 적용에 따른 가해자 처벌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
피해 결과	즉각적 발생	잠재화
개인적 대응	개인의 먹거리 선택으로 피할 수 있음	개인의 먹거리 선택으로 피할 수 없거나 어려움
지속기간	단기적	장기적
시간지향	과거	미래
감정	충격, 분노	불안, 공포

둘째로 확인과 규제 차원에서 살펴보면, 먹거리 사건은 위해 먹거리의 발견에 의해 또는 섭취에 따른 유해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에 알려진다. 그리고 위해 먹거리 생산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뿐만

25) Beardsworth and Keil, *op. cit.*(1997), p.163.

아니라 기존의 식품관련법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후 당국의 규제와 처벌이 가능하며, 따라서 위험한 먹거리의 생산은 중단된다. 반면, 먹거리 파동은 위해 먹거리에 의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첨가물질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에 의한 건강 위험 가능성의 진단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다단계에 걸친 먹거리 생산과정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생산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파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 생산자의 처벌이 어려우며, 이런 먹거리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규제가 어렵다.

셋째, 소비자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먹거리 사건의 위해식품 식별이 상대적으로 쉬워 소비자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먹거리 위험을 피할 수 있거나, 대체 식품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은 단기적으로 해소된다. 반면, 먹거리 파동은 위해요소로 예견되거나 판단된 물질이 이미 가공된 상태로 존재하거나 과학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식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이나 노력만으로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먹거리 불안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감정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먹거리 사건은 개인에게는 시간 상으로 과거에 먹었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며, 그 피해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직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위험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미래의 공포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국의 적극적 조치로 위험이 해소되거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먹거리 자체에 대한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그러한 위험 먹거리를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고, 먹거리 자체가 아니라 먹거리 생산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소비자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먹거리 자체가 아니라 먹거리 생산자이다. 반면, 먹거리 파동은 쉽게 위험물질을 식별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적 노력으로 피할 수 없으며, 그 결과도 잠재화되어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 자체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하며, 미래에 초래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동반한다. 이렇듯 먹거리 파동은 자신의 먹거리 위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거리로 인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공포

의 감정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렇다면 어떠한 감정동학이 먹거리 파동을 불러일으키는가?

## 2. 먹거리 파동: 신뢰와 불신의 변증법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먹거리 불안과 파동은 신체에 현실화된 위해가 아니라 '예상된'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하고, 또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의 확보 내지 위험의 망각을 통해 사라진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는 감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 먹거리 파동에 작동하는 감정범주들이 바로 신뢰와 불신, 그리고 그로부터 결과하는 공포이다. 셀러버그에 따르면, 먹거리의 신뢰(또는 불신)는 인간행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태도이다. 왜냐하면 먹거리는 인간존재의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자신이 소비하는 먹거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6)</sup>

바바렛에 따르면, 신뢰는 “자신이 투영된 확실한 기대감이라는 감정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미지의 미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사회적 행위에서 필수적 토대가 되는 감정”이다.<sup>27)</sup> 기든스에 의하면, 이 신뢰는 사람들의 ‘존재론적 안전(ontological security)’의 바탕을 이룬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지속성에 대해 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뢰의 상실은 “존재론적 불안 또는 공포로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낳는다.<sup>28)</sup>

그렇다면 이러한 먹거리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가? 앞서 시사했듯이, 먹거리 파동은 실제의 먹거리 사건이 아니라 소비자를 두렵게 만드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발생한다. 캐스웰에 따르면 이 같은 먹거리 정보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sup>29)</sup> 첫째, 그 정보가 모처에서 소비자들에게 갑자기 전달된다. 이를테면 먹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광우병과 멜라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26) Sellaerberg, op. cit.(1991), p.193.

27) 바바렛, 앞의 책(2007), p.22, p.152.

28) 안소니 기든스, 이윤희·이현희 역, 『포스트모더니티』(서울: 민영사, 1991), 101쪽, 109쪽.

29) J. Caswell, “A Food Scare a Day: Why Aren't We Better at Managing Dietary Risk?”, *Human and Ecological Risk Assessment*, vol.12(2006), p.10.

알려진다. 둘째로, 그 위험의 맥락이 불분명하다. 즉 그 정보는 위험요소가 발견되었다고 말할 뿐, 그것이 얼마나 누구에게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의 위험과 비교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멜라민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셋째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 이야기가 불연속적이거나 모순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GMO의 경우처럼, 안전성과 위험성이 서로 충돌하는 담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듯 먹거리 위험의 특징은 그 위험을 인지했을 뿐 그 위험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먹거리로 인한 자신의 생존과 건강에 관련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먹거리에 대해 성찰하고 또 그것이 초래할 위험에 맞설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러한 위험 의식은 더욱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현대세계에서 개인들이 먹거리와 관련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주요한 메커니즘이 국가와 '전문지식체계'이다. 먹거리에 대한 신뢰 확보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 또한 앞서 언급한 먹거리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 국가가 개인을 대신해서 먹거리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개별 소비자들은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들은 상식적 지식을 넘어서는 질 높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또한 접근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많이 든다. 둘째,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근대 먹거리 생산은 전문적인 식품 생산기술에 입각하고 있으며, 그 안전성과 위험에 대한 주장 역시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과장된 수준의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잘못된 먹거리의 선택에 따르는 피해 - 이를테면 질병이나 사망 등 - 가 매우 크며, 그 비용은 개인적 수준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광우병 파동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넷째, 필수적이거나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부 먹거리는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하지만 근대 기업 먹거리 체계에서는 먹거리 생산과 가공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의 시야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통제 역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근대 먹거리 체계의 다음과 같은 특성은 먹거리에 대한 국가통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첫째, 먹거리 생산의 산업화는 먹거리의 자연의존적인 농업적 생산을 넘어 가공산업으로서의 식품 생산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먹거리 생산과정에는 무수한 단계들이 존재하고, 각 단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향료와 합성물질이 첨가되고 있어, 국가가 생산과정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델라민 파동은 이 같은 점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둘째로, 글로벌 먹거리 생산체계에서 생산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규제는 생산되는 개별 국가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먹거리 체계의 지구화는 사실 일국이 먹거리 생산을 통제하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또한 먹거리의 안전수준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여전히 세계의 소수지역이며, 국가별 식품위생기준도 달라 위생기준 그 자체가 신뢰를 확보해 주지 않는다. 이는 거듭되는 중국산 먹거리 관련 사건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셋째로,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먹거리는 보다 길고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생산만이 아닌 유통과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실제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의 양심에 맡기고, 국가통제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먹거리의 질과 음식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결정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의사결정 중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sup>30)</sup> 현대사회에서 먹거리 관련 문제가 점점 더 정치화되어 왔으며, 직무에 기반한 원래의 정책공동체는 더 이상 다른 목소리와 의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일단 폐쇄된 과두제적 정책공동체의 통제를 벗어나서 실제로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자 공식적인 주장은 각기 그들 나름으로 경쟁하는 설명들을 제시하는 많은 주장들 중 하나일 뿐이게 되었다.<sup>3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지식체계에 대한 신뢰와 그것에 입각하여 마련된 식품위생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30) M. J. Smith, "From policy community to issue network: salmonella in eggs and the new politics of food", *Public Administration* 69(Summer 1991), p.251.

31) Beardsworth and Keil, *op. cit.*(1997), p.171.

것에 기초해 있었다. 그간 전문지식체계는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생산과정과 알려지지 않은 식품첨가제 및 식품변형에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지식체계 그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식생활 및 건강과 관련한 과학적 담론 역시 왜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는가? 그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먹거리 위험들의 대부분은 과거와 같은 '자연적' 위험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한 '제조된 위험'이라는 점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불확실성은 바로 인간지식의 증가에 의해 창출되어 온 것이었다."<sup>32)</sup> 광우병 파동, 멜라민 파동, GMO 파동은 모두 제조된 위험이 초래한 먹거리 파동들이다. 그리고 이 제조된 위험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가 우리가 너무 늦지 않은 시점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sup>33)</sup> 이제 과학과 전문지식 그 자체는 먹거리 신뢰의 기반이기보다는 과학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벡의 지적대로, "위험의 근원은 이제 더 이상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sup>34)</sup>

둘째로, 먹거리와 관련된 전문지식에도 이른바 '초과학적 질문'들이 존재한다. 바인베르크에 따르면, 초과학적 질문이란 과학자들이 특정 분과학문 내에서 널리 주장되고 있는 견해에 토대해서 아주 합리적·이성적으로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과학 그 자체로는 만족스러운 또는 분명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는 질문을 말한다.<sup>35)</sup> 이 같은 질문의 현저한 사례가 바로 먹거리 파동을 유발한 질문들, 즉 인간 광우병은 얼마나 발생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과 멜라민에의 장기적 노출이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와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숨어 있던 사실을 폭로하든가 새로운 건강 위협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적들이 거듭 발표되고 있다. 국내에서 출간된 것들만으로도 먹거리의 위험성을 직접 알리는 제목을 하고 있는 책들만 언급하더

32) A. Giddens, "Risk, Trust, Reflectivity", Beck, U., Giddens, A. and Lash, S.(eds), *Reflexive Modernis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Cambridge: Polity Press, 1994), p.185.

33) 안소니 기든스, 박찬욱 역, 『질주하는 세계』(서울: 생각의나무, 2000), 73쪽.

34) U. Beck, *Risk Society*(London: Sage, 1992), p.183.

35) A. M. Weinberg, "Science and trans-science", *Minerva* vol.10, no.2(1972); Beardsworth and Keil, *op. cit.*(1997), p.159에서 재인용.

라도, 광우병을 직접 다룬 책으로 『죽음의 향연: 광우병의 비밀을 추적한 공포와 전율의 다큐멘터리』(2006)와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2007) 등이 있고,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험성을 다룬 책으로는 『먹지마세요 GMO』(2008),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2009), 그리고 식품첨가제의 위험을 다룬 책으로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2006) 등을 들 수 있다.<sup>36)</sup>

넷째, 대안적 지식인 집단 및 건강 관련 운동 단체가 출현하여 끊임없이 대항지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과정에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등은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를 결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고, 유전자 조작 옥수수가 수입될 때도 3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유전자조작옥수수수입반대국민연대’가 ‘GMO Free 선언’을 촉구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sup>37)</sup> 이러한 전문지식을 둘러싼 과학자들 간의 논쟁은 사실 과학의 본연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더욱이 먹거리와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을 경고하는 지식은 다른 지식보다 더 신뢰받는다는 점에서,<sup>38)</sup>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이렇게 볼 때, 지식은 그것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위험과 그 위험에 대한 인식 모두를 창출한다.

이와 같은 국가와 전문지식체계의 신뢰 상실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통제불가능성과 우리의 행위결과를 알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초래하는 감정이 바로 공포이다. 바우만에 따르면, “공포란 곧 불확실하다는 것, 위험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 따라서 그것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sup>39)</sup>

36) 리처드 로즈, 안정희 역, 『죽음의 향연: 광우병의 비밀을 추적한 공포와 전율의 다큐멘터리』(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콧 켈러허, 김상윤·안성수 역,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서울: 고려원북스, 2007); 마틴 티틀, 김은영 역, 『먹지마세요 GMO』(서울: 미지북스, 2008); 김은진,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서울: 도솔, 2009); 아베 쓰카사, 안병수 역,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파주: 국일출판사, 2006).

37) 윤형근, 「식량 위기의 해법, 먹거리 민주주의」, 『환경과생명』 08/여름, 통권 56호 (2008), 31쪽.

38) Furedi, *op. cit.*(2004), p.145 참고

39)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서울: 산책자, 2009), 12쪽.

그리고 공포는 과거에 마주했던 또는 현재 우리가 실제로 마주한 위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이에 아담 스미스는 공포는 “전적으로 상상력으로부터 도출되는 걱정, 즉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고통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 표현한다”고 지적한다.<sup>40)</sup> 다시 말해 공포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전망이다.”<sup>41)</sup> 그리고 ‘공포스러운 것은 ‘아직 닥치지 않은 것’이며, 공포의 감정적 성격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42)</sup>

이렇듯 공포의 대상은 손상 또는 피해에 대한 예견이지 피해야만 하는 위협적인 행위자 또는 물리적 힘 그 자체가 아니다. 이처럼 공포는 합리적 선택에 의해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위협에 처할지도 모르는 감정적 느낌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의심조차 하지 않던 먹거리와 관련한 건강 위협 정보가 죽음 또는 심각한 위협의 공포를 초래할 때 소비자들은 그 정보의 진위와는 무관하게 먹을 것에 대한 선택을 변경한다. 이렇듯 공포는 실제 위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게다가 공포는 위협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감정적 분위기는 사회적·정치적 조건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 및 제약에 대한 느낌과 감상의 준거점으로 기능함으로써 먹거리와 관련한 공포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먹거리 파동이 발생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이다.<sup>43)</sup> 이상과 같이 먹거리 파동은 ‘공포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이 공포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근대 먹거리 체계에 내재하는 것으로, 그 태생적 한계가 노출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40) A.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30.

41) 바바렛, 앞의 책(2007), 260쪽.

42)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하이데거의 기본분석을 바탕으로』(화성: 청계, 2002), 33쪽 참고.

43) 박형신·이진희, 「먹거리, 감정, 가족동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사회와 이론』 통권 13집(2008) 참고.

### 3. 먹거리 신뢰 회복 전략

바우만은 『유동적 공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동적 근대세계에서는 공포와의 싸움이란 평생 끝나지 않는 과업이다. 공포를 일으키는 위협, 그것은 설령 그 중 어느 것도 처치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살면서 내내 떨쳐낼 수 없는, 포착불가능한 동반자로 느껴진다. 인간은 공포 없는 삶을 살 수 없고, 유동적 근대의 환경은 도처에 위협과 위협을 깔아놓았다. 이제 일생 전체가 공포, 어쩌면 끝끝내 물리치지 못할 공포와의 길고도 험난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는 진짜 또는 추정상의 위협과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인생이란 끝없는 수색정찰의 과정, 그리고 압박한 위협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대책을 시도하는 과정이다.<sup>44)</sup>

이 같은 상황은 우리가 다양한 “위협과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먹거리와 관련한 위협은 여타 위협 및 공포와는 다르다. 우리는 먹거리 공포와 함께 살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선택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논자의 지적처럼, 먹거리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sup>45)</sup> 이러한 먹거리의 특성상 먹거리 공포가 계속될 경우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세 당사자들, 즉 국가, 생산자,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국가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기본적 가치를 침해함으로써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둘째, 식품기업에는 이윤획득의 실패는 물론 기업을 존폐 위기로 밀어넣는다. 셋째, 소비자가 공포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것은 건강 또는 웰빙의 위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각 주체들은 먹거리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이 신뢰 회복 방법에서 국가와 생산자는 근대 먹거리 체계의 보완 내지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는 근대 먹거리 체계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우회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식품관리체계의 개편 및 강화를 공언하거나 다시 전문지식체계에 입각한 과학적 먹거리 관리를 거듭 천명하는 것이다. 광우병과 멜라민 파동 이후 농식품부가 식품안전기관을 통합하

44) 바우만, 앞의 책(2009), 20-21쪽.

45) 김수현, 『생존의 밥상: 광우병에서 멜라민까지 죽음을 부르는 끔찍한 공포』(서울: 벵스스BOOKS, 2009), 6쪽.

는 등 대대적인 관련업무의 정비에 나선 것이나,<sup>46)</sup> 원산지 검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한 것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허술한 먹거리 검사와 심각한 인력 장비 부족에 대한 지적<sup>47)</sup>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처럼 이미 국가관리체계의 허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먹거리 관리 대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WTO 등 세계경제기구가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경제활동을 우선시하고, 개별 국가 또한 먹거리 소비자의 안전보다 먹거리 생산자의 이익에 더 높은 순위를 두는 현실에서, 국가의 먹거리 정책은 광우병 파동에서처럼 공중의 공포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공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국가를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둘째, 먹거리 파동으로 인해 불신의 늪에 빠진 생산자들의 전략은 생산과정의 투명화라는 장기적 전략보다는 개별 기업의 유지라는 단기적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것은 기존 생산체계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먹거리 위협의 상업화’로,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을 통해 자사 제품의 신뢰를 획득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것이 멜라민 파동 이후 제과업계에서 나타난 전략으로, 이를테면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맞춤형 건강 안심 과자’”라는 점을 내세우며<sup>48)</sup> 소비자의 신뢰를 재획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새로운 위협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것의 장기적 안전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높은 가격은 ‘먹거리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셋째,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안전한 먹거리 전략은 ‘생활협동조합운동’이다. 국가와 생산자들의 전략이 근대 먹거리 체계가 만들어낸 거리(푸드 마일)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제와 고급화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이 소비자 운동은 푸드마일의 축소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먹거리 불신의 문제는 생협이 먹거리에까지도 뺏치고 있다. 생협은 생협 내에까지 파고든 자본의 논리를 억제하고 자신들의 먹거리 불신을 없애기

46) 《연합뉴스》, 2008년 9월 22일자.

47) SBS 8시 뉴스, 2005년 9월 12일.

48) 《한겨레 21》, 2009년 3월 20일자(제752호).

위해 위조가 어려운 'A마크'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sup>49)</sup> 그리고 이러한 먹거리 운동 역시 모든 사람들의 먹거리 안전이 아닌 운동참여자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그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즉 먹거리 소비자가 먹거리의 생산·소비자가 되는 전략(DIY)이 선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모든 먹거리 및 첨가식품까지 직접 생산하여 소비할 수 없는 한 한계를 지니며,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노력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신뢰전략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파동은 시간에 따라 약화되고 잊혀진다. 실제로 이것은 먹거리에 대한 완전한 신뢰 구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그럼 과연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먹거리 파동의 감정적 성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가능한 설명은 감정은 그 성격상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감정은 외부의 물리적·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된다. 만약 먹거리 파동을 유발하는 공포와 같은 감정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계속된다면, 인간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를 위협한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그러한 공포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슬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두 번째로 가능한 설명은 잠재적 위험까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한 안전하다는 믿음의 강화이다. 이것 또한 존재론적 안전감을 지니고자 하는 내재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소비자 개인들의 의식적인 신뢰 전략에 대한 자기 믿음이 자신은 공포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자기암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공포감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먹거리에 대한 불안의식은 내재한다.

## V. 맺음말: '먹거리 윤리학'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사회학의 접근방식을 통해 먹거리 파동의 구조적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동학을 설명해 왔다. 이러한 설명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먹거리 파동이 사라졌다고 해서 먹거리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49) 《한겨레 21》, 2008년 9월 26일자(제728호).

것은 아니며, 다만 수면 아래로 감정적으로 침잠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점이 바로 먹거리 파동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먹거리 파동의 감정동학을 잠재우는 것은 신뢰라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먹거리 불안과 파동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수 있을까? 앞서도 설명했듯이, 먹거리 파동의 근원은 근대 먹거리 체계 및 글로벌 먹거리 생산체계에 내재해 있다. 결국 먹거리 불안과 파동은 현대 먹거리 생산 및 유통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다국적 농식품 기업들은 먹거리에 철저하게 이윤논리를 적용시키고 있고, WTO체계의 보호를 받는 초국적 농식품 자본들은 개별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고 있기에, 소비자들은 국가의 먹거리 통제에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루만에 따르면, “신뢰는 인간 삶의 기본적 사실이다.”<sup>50)</sup> 그는 신뢰의 완전한 부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며, 막연한 공포감으로 고통받게 한다고 지적한다.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특히 먹거리에 대한 신뢰는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 사실을 넘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불안과 불신이 초래하는 공포가 무섭다고 해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신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먹거리와 관련하여 공포와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신뢰 전략’을 구사한다. 이 신뢰 전략은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면, 크게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현대사회의 파편화된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방식으로 이른바 ‘신중의 원리’라고 칭해지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sup>51)</sup> 이 방식은 자연식품 내지 자신이 안전한 식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히 선택하여 스스로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개인적 선택을 강화하는 이 같은 방식은 위험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그대로 둔 채, 그리고 먹거리 생산자를 여전히 불신하면서 자신의 먹거리 자체에만 신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회피 전략은 끊임없는 불안에 의해 추동되고 있으며, 상상적 안심에 의해만 먹거리

50) N. Luhmann, *Trust and Power*, Chichester: John Wiley & Sons(1979), p.4.

51) Furedi, *op. cit.*(2004), ch. 7 참고.



공포를 축소시키지만 먹거리 생산자를 더욱 불신하게 만든다.

반면,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뢰 전략은 위험회피 전략이라기 보다 위험극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는 근대 먹거리 체계에 내재한 불안의 근원을 축소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을 대변하는 관념이 바로 ‘먹거리 주권’ 또는 ‘먹거리 민주주의’이다. 2007년 말리의 셀링게에서 개최된 ‘먹거리 주권 포럼’에서 채택된 닐레니 선언(Declaration of Nyeleni)에 따르면, “먹거리 주권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먹거리와 농업체계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먹거리 주권은 시장과 기업의 수요가 아니라 먹거리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식품체계와 정책의 주인공으로 여긴다.”<sup>52)</sup> 이 새로운 먹거리 주권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결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직 모색단계에 있는 먹거리 민주주의 개념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이 개념이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주권”이다.<sup>53)</sup> 이 입장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자치와 자율인 것처럼 먹거리의 자치와 자율로서의 ‘자급’에 대한 관점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동에서 얻은 교훈처럼 먹거리 자치권으로서의 검역주권과 식량주권 확립을 통해 자유시장을 제어해야 하며, 한편으로 자급을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확장된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줄이는 ‘지역 먹거리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로 대안적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로컬푸드운동’, 즉 지역먹거리운동이다.<sup>54)</sup> 이 지역먹거리운동은 돌봄과 책임감이라는 관계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복원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재 붕괴된 지역자원의 연결고리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진다고 평가받기도 한다.<sup>55)</sup> 이러한 대안적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단지 자신이 먹는 먹거리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의 신뢰를 재구축하고자

52) 김철규, 앞의 논문(2008a), 26쪽에서 재인용.

53) 윤형근, 앞의 논문(2008), 47쪽.

54) 브라이언 헬웨이, 김종덕·허남혁·구준모 역, 『로컬푸드』(서울: 시울, 2006).

55) 윤병선, 「세계 농식품체계 하에서 지역먹거리운동의 의미」, 『ECO』 제12집 2호(2008).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따라서 한 논자는 이 대안농산물 체계의 특징은 한마디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의 확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56)</sup> 하지만 동일한 논자는 그것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 경향이다.<sup>57)</sup> 다시 말해 관행농업의 여러 특징들, 즉 포드주의 생산과 유통, 이윤지향의 가치 중시, 거대 기업농 및 농공업화 등이 친환경농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친환경농업에도 이윤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먹거리 불안 및 파동과 관련한 현재 신뢰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계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현대 먹거리 체계를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거둬 불신을 조장하고,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행위자- 먹거리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먹거리 불안은 이 먹거리 체계의 논리에 대한 감정적 반응, 즉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 체계의 논리가 작동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먹거리 체계 자체가 아무리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생산자 및 그 관련자들을 의심한다면, 먹거리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먹거리 감정은 실제의 위험이 아닌 추정상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먹거리 신뢰는 제도에 대한 믿음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확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먹거리 체계가 먹거리 자체의 안전성과 무관하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먹거리와 관련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 감정사회학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먹거리 윤리학’의 정립이다. 이는 우리의 욕망과 같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제도라기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윤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논리이다. 즉 먹거리 불안과 파동이 감정동학에 의해 작동한다면, 그러한 감정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먹거리와 관련한 사람들의 윤리이다. 먹거리 관련자들의 윤리적 행위만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먹거리 체계에서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먹거리는 상품 이상이고,

56) 김홍주, 「생협 생산자의 존재형태와 대안농산물체계의 모색: 두레생협 생산자회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6집 1호(2006), 107쪽.

57) 김홍주, 「풀무생협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18집 1호(2008), 45-46쪽.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 또한 소비자 이상”이기 때문이다. 즉 먹거리와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상품의 관계를 넘어선다.<sup>58)</sup> 따라서 생산자에게는 이윤동기 이상의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가치가 요구된다. 이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내 가족의 먹거리는 생각으로 만든다”는 말은 흔히 듣는 말이고, 심지어 현재의 생산체계에서는 생산자의 이윤동기를 숨기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말을 생산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신뢰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들에게는 이것이 말이 아닌 윤리적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소비자들 역시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최근 ‘공정무역운동<sup>59)</sup>과 함께 ‘착한 소비’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한다. 공정무역이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제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좋은 물건을 제값에 직거래함으로써 원조 대신 정의로운 거래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이다.<sup>60)</sup>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 값 주고 산다는 것이다. 먹거리는 소비자들의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생산자에게는 생계의 원천이다. 생산자들에게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먹거리의 생산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생존전략이 되며, 끝없는 싸 먹거리 생산경쟁은 결국 모두에게 ‘죽음의 밥상’을 차려준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상품으로서의 먹거리가 아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의 원천으로서의 먹거리라는 인식에 기초한 ‘먹거리 윤리학’의 정립이 요구된다. 먹거리 생산의 기술적 한계가 노정된 현재로서는, 먹거리 윤리라는 도덕감정의 확립만이 먹거리 공포와 먹거리 파동을 보다 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감정적 토대가 될 것이다.

58) Winson, A., *The Intimate Commodity*(Ontario: Garamond Press, 1993); 김종덕, 앞의 책(2009), 91쪽에서 재인용.

59) 마일즈 리트비노프·존 메달레이, 김병순 역,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서울: 모티브, 2007).

60) 강수돌, 「비싼 돈 주고 사는 건 바보짓이라고? 그 아름다운 바보짓이 세상을 살려!», *홍세화* 외, 『거꾸로 생각해 봐!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일걸』(서울: 낮은산, 2008), 44쪽.

## 참 고 문 헌

- 강수돌, 「미싼 돈 주고 시는 건 바보짓이라고? 그 아름다운 바보짓이 세상을 살려!」.  
홍세화 외, 『거꾸로 생각해 봐!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일걸』, 서울: 낮은산, 2008,  
40-61쪽.
- 강이현, 「공포의 식탁: 인간 욕망에 대한 지구의 경고-광우병 쇠고기, GMO, 조류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환경과생명』 08/여름, 통권 56호, 2008, 49-61쪽.
-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하이데거의 기분분석을 바탕으로』. 화성:  
청계, 2002.
- 권영근, 「환경 호르몬, 유전자 조작 물질, 먹을거리의 안전」. 『환경과생명』 통권  
30호, 2001, 62-82쪽.
- 기든스, 안소니, 박찬욱 역, 『질주하는 세계』. 서울: 생각의나무, 2000.
- 기든스, 안소니, 이윤희·이현희 역, 『포스트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1991.
- 김수현, 『생존의 밥상: 광우병에서 멜라민까지 죽음을 부르는 끔찍한 공포』. 서울:  
넥서스BOOKS, 2009.
- 김은진,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서울: 도솔, 2009.
- 김종덕,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푸드』. 서울: 이후, 2009.
- 김철규, 「현대 식품체계의 동학과 먹거리 주권」. 『ECO』 제12권 2호, 2008a, 7-32쪽.  
\_\_\_\_\_,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먹거리 정치」. 『한국사회』 제9집 2호, 2008b, 123-146쪽.
- 김홍주, 「생협 생산자의 존재형태와 대안농산물체계의 모색: 두레생협 생산자회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6집 1호, 2006, 95-142쪽.  
\_\_\_\_\_, 「풀무생협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18집  
1호, 2008, 43-89쪽.
- 랭, 팀·마이클 헤즈먼, 박중근 역, 『식품전쟁: 음식 그리고 문화와 시장을 둘러싼  
세계대전』. 서울: 아리, 2007.
- 로즈, 리처드, 안정희 역, 『죽음의 향연: 광우병의 비밀을 추적한 공포와 전율의  
다큐멘터리』.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 리트비노프, 마일즈·존 메달레이, 김병순 역,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장무역』.  
서울: 모티브, 2007.
- 맥도프 프레드·존 포스터·프레드릭 버텔 편, 유병선 외 역, 『이윤에 굶주린 자들』.  
서울: 울력, 2006.
- 바바렛, 잭,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  
는가?』. 서울: 일신사, 2007.
- 바바렛, 잭, 「서론: 왜 감정이 중요한가」. 잭 바바렛 편,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

- 서울: 이학사, 2009, 7-22쪽.
- 박성희, 「위험보도의 위기구축 기제 프레임 분석: 식품안전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5호, 2006, 181-210쪽.
- 바우만, 지그문트,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서울: 산책자, 2009.
- 박재환, 일상성·일상문화연구회, 『일상과 음식』. 한올아카데미, 2009.
- 박형신·이진희, 「먹거리, 감정, 가족동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사회와 이론』 통권 13집, 2008, 147-183쪽.
- 박형신·정수남,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 이론』 통권 15집, 2009,  
195-234쪽.
- 아베 쓰카사, 안병수 역,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과주: 국일출판사,  
2006.
- 유선형·이강형, 『저신뢰 위험사회의 한국 언론』.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8.
- 윤병선, 「세계 농식품체계 하에서 지역먹거리운동의 의미」. 『ECO』 제12집 2호,  
2008, 89-115쪽.
- 윤형근, 「식량 위기의 해법, 먹을거리 민주주의」. 『환경과생명』 08/여름, 통권  
56호, 2008, 31-48쪽.
- 이귀옥·박조원, 「식품 위해(food risk)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석: 김치 파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0집 5호, 2006, 260-305쪽.
- 이철호·맹영선, 『식품위생사건백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철호, 『식품위생사건백서』II,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 \_\_\_\_\_, 「우리나라 식품위생사건의 발생현황과 대응사례분석」. 『식품과학과 산업』  
제39집 2호, 2006, 3-10쪽.
- 최정숙·전혜경·황대용·남희정, 「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 우려의  
관련요인」.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제34권 1호, 2005, 66-74쪽.
- 켈러허, 콧, 김상윤·안성수 역,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서울: 고려원북스, 2007.
- 티틀, 마틴, 김은영 역, 『먹지마세요 GMO』. 서울: 미지북스, 2008.
- 헬헤일, 브라이언, 김종덕·허남혁·구준모 역, 『로컬푸드』. 서울: 시울, 2006.

- Beardsworth, A. and Teresa Keil, *Sociology on Menu: An Invitation to the Study  
of Food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1997.
- Beck, U., *Risk Society*. London: Sage, 1992.
- Caswell, J., "A Food Scare a Day: Why Aren't We Better at Managing Dietary  
Risk?". *Human and Ecological Risk Assessment*, vol.12, 2006, pp.9-17.
- Fischler, C., "Food Habits, Social Change and the Nature/Culture Dilemma". *Social*

- Science Information*, vol.19, no.6, 1980, pp.937-953.
- Furedi, F., *Culture of Fear Revisited*. London: Continuum, 2004.
- Ganskau, E., *Trust in Coping with Food Risks: The Case of St. Petersburg Consumers*. Saarbücken, VDM, 2008.
- Giddens, A., "Risk, Trust, Reflectivity". Beck, U., Giddens, A. and Lash, S.(eds), *Reflexive Modernis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1994, pp.184-197.
- Kneen, B., *From Land to Mouth*.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2.
- Knight A. and R. Warland, "Determinants of Food Safety Risk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Rural Sociology*, vol.70, no.2, 2005, pp.253-275.
- Luhmann, N., *Trust and Power*.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979.
- McMichael, P., *The Global Restructuring of Agro-Food Syste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Miller, D. and Reilly, J., "Making an issue of food safety: the media, pressure groups, and the public sphere". in D. Maurer and S. Sobel(eds), *Eating Agendas: Food and Nutrition as Social Problem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5, pp.305-336.
- Sellerberg, A. M., "In food we trust? Vitally necessary confidence and unfamiliar ways of attaining it". in E. L. Fürst, R. Prättälä, M. Ekström, L. Holm and U. Kjaernes(eds), *Palatable Worlds: Sociocultural Food Studies*, Oslo: Solum Forlag, 1991, pp.193-202.
- Smith, A.,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Smith, M. J., "From policy community to issue network: salmonella in eggs and the new politics of food". *Public Administration* 69, Summer 1991, pp.235-255.
- Weinberg, A. M., "Science and trans-science". *Minerva*, vol.10, no.2, 1972, pp.209-222.
- Winson, A., *The Intimate Commodity*. Ontario: Garamond Press, 1993.

## 부 록

표3-우리나라 주요 식품위생사건의 원인과 결과(-1996)

사건명	고발자	사건유형	피해자	후속조치/결과
롱가리트사건 (1966)	검찰	식품법규의 모순	식품업 관계자 구속	식품법 개정
화학간장사건 (1985)	TV고발	제조업자의 무지 비전문가 고발	간장제조업체 국산식품 불신감	외제식품 대가상륙
화학조미료논쟁 (1985)	소비자단체	비전문가 고발	국내 관련기업의 경제적 손실 및 국제경쟁력 약화	정부의 안전성 재확인, 부정적 광고 금지
포장랩 유해논쟁 (1988, 89)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경쟁사 간 무고	소비자 불신감 포장재업체 전체	법정공방, 기소제동 첨가제사용 규제
우지파동 (1989)	검찰	비전문가 고발	소비자 대혼란 관련식품업체	9년여 법정공방 식품회사 승소 관련기업 부도
수입자몽 알라파동 (1989)	소비자단체	관련법규의 미비	수입식품 불신감 한미통상마찰	농약잔류량 기준 설정
수입밀 농약오염 (1992)	국회의원	검역행정 및 분석기술의 미비	소비자 불안감 국제통상마찰	의혹밀 사료용 전환 원산지 품질검사 자료인정제도 확대
콩나물 농약오염 (1990~)	검찰 위생당국	업자의 의도적 행위 관련법규의 불합리	업자 구속 소비자 불신	진류허용치 논란 농리부로 관리이관
톨루엔오염사건 (1994)	일본후생성 TV고발	업체의 부주의	국산식품 대외 신뢰도 하락	분석법 개발 공정관리 개선
고름우유사건 (1995)	TV고발	업체간 상호비방	소비자 불안감 우유소비 급감	상호비방광고 중지 우유잔류항생물질 허용기준치 설정
산분해간장 MCPD 사건 (1996)	시민단체	비전문가 고발	소비자 불안감 관련식품업계	기준규격 제정 신기술 공정개발

\* 위 표에 표기된 먹거리 사건과 먹거리 파동의 구분은 원 저자의 구분으로 이 논문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4-우리나라 주요 식품위생사건의 원인과 결과(1996-2005)

사건명	고발자	사건유형	피해자	후속조치/결과
대장균 O-157 오염사건 (1997)	검역당국	수입 쇠고기 병원균 오염	미국산 쇠고기 외식업체	미국의 신선육 금수조치 방사선조사 허용
통조림 포르말린사건 (1998)	검찰	비전문가 오판	통조림제조업자 구속	무죄, 업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
내분비장애물질 유해논란 (1998)	해외보도	유해 환경오염 및 식품경고	불임부부 차세대 영향	환경오염방지대책 오염식품 경고
유전자변형 두부사건 (1999)	소비자보호원	표시제도 위반 분석방법 논란	두부제조업체	손해배상 맞고소
미니컵 젤리 질식사건 (2001)	소비자	제품 형태의 내재적 위험	어린이, 장애인	제조판매 금지조치
비아그라 식품 사건(2001)	식약청	약덕업자의 부정행위	불특정 국민다수	유사물질 분석 기술 개발
전자분유 식중독균 검출사건 (2001)	축산물 검사소	관련법의 미비	유가공업체 제품 폐기	정량적미생물위해 평가의 필요성 대두
생식제품 식중독균 검출사건 (2002)	소비자 단체	식품법의 미비	생식제조업체	미생물위해분석 생식의 규격기준 제정
아크릴아마이드 파동 (2002)	스웨덴 식품청	튀김 중 자연발생 위해수준 논란	외식업체 스낵제조업체	통상수준은 무해 저감기술 개발
조류독감 파동 (2003)	방역당국	과잉보도 지나친 경각심	닭, 오리고기 전문점 축산농가	무해 홍보
광우병 쇠고기 파동 (2003)	미국 농무부	미국산 쇠고기 위해정보	국내 쇠고기전문점 쇠고기 수입업체	금수조치 광우병 경계령
아질산염 논란 (2004)	환경단체	비전문가 고발	육가공업체	학계 및 업계 해명
불량만두 사건 (2004)	경찰	과장 조작 보도 당국의 대응 미숙	만두업체 전반 국가신인도 추락	손배소송 식품법 강화요구
수출러면 방사선 조사논란 (2005)	영국 식품청	표시위반에 의한 수입금지, 회수명령	라면스낵 제조업체	분석기술 점검 표시기준 점검
김치 기생충알 파동 (2005)	식약청	당국의 오판 및 대응 미숙	김치업계 대외수출 격감	제조위생 강화, 관리체계 개편요구
과자첨가물 위해 파동 (2006)	TV고발	업계의 사전대비 부족	제과류 및 가공 식품산업 전반	식품위해평가 선진화 요구

출처: 이철호, 「우리나라 식품위생사건의 발생현황과 대응사례 분석」, 『식품과학과 산업』 39집 2호(2006).



##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먹거리 불안과 먹거리 파동에 대한 감정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먼저 먹거리의 양가성과 근대 먹거리 체계의 특성으로부터 먹거리 불안의 구조적 발생 메커니즘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파동이 형성되고 사라지게 되는 감정동학을 설명한다. 특히 단순한 먹거리 사건과 먹거리 파동을 논리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먹거리 파동의 감정적 성격을 밝히고, 먹거리 파동을 신뢰와 불신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공포 커뮤니케이션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먹거리 파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먹거리 윤리학'을 제시한다.

**투고일** 2010. 4. 12.

**수정일** 2010. 5. 24.

**게재 확정일** 2010. 6. 7.

**주제어(keyword)** 먹거리(food), 먹거리 불안(food anxiety), 먹거리 파동(food scare), 근대 먹거리 체계(modern food system), 신뢰(trust), 불신(distrust), 공포커뮤니케이션(fear communication), 먹거리 윤리학(the ethics of food).